

【헌 법】

1. 관습헌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관습헌법의 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서울이 수도인 사실’은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불문의 헌법규범으로 승화된 것으로, 사실명제로부터 당위명제를 도출해 낸 것이다.
- ②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실질적 헌법사항이지만, 의회의 소재지를 정하는 문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국민은 성문헌법의 제·개정에 참여할 수 있지만, 헌법전에 포함되지 아니한 헌법사항을 필요에 따라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할 수는 없다.
- ④ 관습헌법규범은 헌법전에 그에 상반하는 법규범을 첨가함에 의하여 폐지하게 되는 점에서, 헌법전으로부터 관계되는 헌법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폐지되는 성문헌법규범과는 구분된다.

2.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장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제안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① ㉠(O) ㉡(O) ㉢(X) ㉣(X) ② ㉠(O) ㉡(X) ㉢(X) ㉣(X)
- ③ ㉠(X) ㉡(O) ㉢(X) ㉣(O) ④ ㉠(X) ㉡(X) ㉢(O) ㉣(X)

3.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헌헌법에서는 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였다.
- ② 제2차 개정헌법은 국무총리제도를 폐지하였다.
- ③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은 임기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또는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되지만, 합당 또는 제명으로 소속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을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 ④ 제7차 개정헌법에서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4. 선거와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전국선거구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다.
- ②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할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정당법」에 의하면 중앙당은 정당의 예산과 결산 및 그 내역에 관한 회계검사 등 정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검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④ 「정당법」에 의하면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5. 위헌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중구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 외에 헌법상의 경제질서도 포함된다.

③ 「헌법재판소법」은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되면 소속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더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될 수 없다.

6. 소급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②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 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 ③ 진정소급입법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와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지만,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 부진정소급입법에 속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과거에 시작된 구성요건 사항에 대한 신뢰는 더 보호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심사가 장래입법에 비해서보다는 일반적으로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7. 제도적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제도적 보장은 객관적 제도를 법률에 규정하여 당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제정권자가 특히 중요하고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고 법률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장래의 법발전, 법형성의 방침과 범주를 미리 규율하려는 데 있다.
- ㉡ 기본권 보장은 “최대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됨에 반하여, 제도적 보장은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입법자에게 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형태의 형성권을 좁게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될 뿐이다.
- ㉢ 지방자치단체장은 헌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신분보장이 필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해당하여 헌법 제7조의 해석상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입법적 의무가 도출된다.
- ㉣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그 자체를 이유로 일정한 신분상 불이익처분이 내려 지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방법과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 인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 것으로서 그 중 어느 방법만이 헌법에 합치하고 다른 방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따라 공무원에 대하여 부과되는 신분상 불이익과 그로 인하여 보호하려고 하는 공익이 합리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헌법적 제약이 따른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에 관해서는 외국인의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주체성의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② 공법인은 공무를 수행하거나 고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만,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성이 부인된다.
- ③ 국가 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 이전에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본권이다.
- ④ 수정란이 모체에 착상되어 원시선이 나타나는 그 시점의 배아 상태에 이르지 않은 배아에게도 국가의 보호필요성이 있어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된다.

9.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하더라도 국가의 보호의무를 입법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집행자가 어떻게 실현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권력분립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민에 의하여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법자의 책임범위에 속한다.
- ②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로서는 그 위협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사회·경제적인 여건 및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행정상의 조치를 취하여 그 침해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유지할 포괄적인 의무를 진다.
- ③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 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국가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로부터 태아의 출생 전에, 또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것인가와는 무관하게, 태아를 위하여 「민법」상 일반적 권리능력까지도 인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 도출된다.

10. 기본권 경합과 충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 ② 하나의 규제에 의해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먼저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한다.
- ③ 채권자에게 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함으로써, 채권자의 재산권과 채무자와 수익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채권자의 재산권이 채무자 및 수익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보다 상위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 ④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어느 하나를 상위 기본권이라고 하거나 어느 쪽이 우월하다고 할 수 없기에, 이러한 경우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되 법익형량의 원리, 입법에 의한 선택적 재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1. 기본권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헌법 제40조와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더라도 위임입법에 의하여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
 - ㉣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 ① ㉠(O) ㉡(O) ㉢(X) ㉣(O)
 - ② ㉠(O) ㉡(X) ㉢(X) ㉣(O)
 - ③ ㉠(X) ㉡(O) ㉢(O) ㉣(X)
 - ④ ㉠(X) ㉡(X) ㉢(O) ㉣(X)

12. 헌법 제10조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제한하는 「민법」 제847조 제1항 중 ‘부(夫)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 부분은 부(夫)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②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영상감사기에 올라가 검사기에 장착된 카메라에 짧은 시간 항문 부위를 보이도록 하고, 검사실과 분리된 통제실에서 전담 교도관 1인만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모니터 주변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출력된 영상정보로 은닉물의 존재 여부만을 관찰하며, 영상정보를 녹음·녹화할 수 없도록 하더라도, 이러한 신체검사는 필요한 최소한도를 벗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수용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가치있는 행동만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이 대마를 자유롭게 수수하고 흡연할 자유도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 ④ 헌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적 인권 보장의 의무로부터 독도 방문객을 위하여 독도에 대피시설이나 의무시설, 관리사무소, 방파제 등의 특정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의 의무가 나온다.

13. 평등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에 대하여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구「의료법」 제43조 제1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②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 협의로 지정되거나 주로 부양한 자녀가 없는 경우 나이가 많은 자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3호 전문 전단 중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정하는 부분’은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의 기간조항이 1972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군인 등으로 복무한 후 이 법에서 정한 질병을 얻은 자와 그 이후에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군인 등으로 복무한 후 이 법에서 정한 질병을 얻은 자를 다르게 취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④ 헌법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차별금지명령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 평등원칙을 혼인과 가족생활영역에서 더욱 더 구체화 함으로써 혼인과 가족을 부당한 차별로부터 특별히 더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며, 이 때 특정한 법률조항이 혼인한 자를 불리하게 하는 차별취급은 중대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여 헌법상 정당화 되는 경우에만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14.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신앙의 자유는 신과 피안 또는 내세에 대한 인간의 내적 확신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 ㉡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침해와 관련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는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일반 규정을 통하여 사법상으로 보호되는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침해 등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하여져야 한다.
- ㉢ 종교단체가 종교시설 내에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본문 제3호 중 “납골시설” 부분은 종교행사의 자유를 제한한다.
- ㉣ 어떤 조형물이 일부 종교적 색채를 띤다면 그것이 이미 우리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관습화된 문화요소로 인식되고 받아들여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이러한 조형물을 역사적 중요성이나 문화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아 유지하는 것은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

- ① ㉠㉡ ② ㉡㉢ ③ ㉠㉡㉢ ④ ㉠㉢㉣

1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불구속 피의자·피고인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 ②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출발점은 변호인선임권에 있고,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부분으로서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다.
- ③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국가안전 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으므로 변호인과의 접견 자체에 대해서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다.
- ④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권리로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하여 이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16. 헌법상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진술거부권은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 절차에 계속 중인 자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자에게도 보장되나 행정절차에서는 보장되지 않는다.
- ㉡ 구「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증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않았다면 증인은 위 법률에 의해 진술거부권이 침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 진술거부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진술’이라 함은 언어적 표출, 즉 개인의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치자금을 받고 지출하는 행위를 문자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진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 채무자의 재산명시기일에서의 재산목록 작성·제출행위는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① ㉠(O) ㉡(O) ㉢(X) ㉣(X) ② ㉠(O) ㉡(X) ㉢(X) ㉣(X)
③ ㉠(X) ㉡(X) ㉢(O) ㉣(O) ④ ㉠(X) ㉡(X) ㉢(X) ㉣(O)

17.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에 포함되므로 헌법상 독자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은 법인도 정보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 ③ 형제자매가 본인의 위임 없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은 본인이 스스로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형제자매를 통해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게 하고, 형제자매가 자신의 친족·상속 등과 관련된 권리의무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본인의 신분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각종 증명서를 쉽고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고,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④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이 특정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법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중 제1호의 ‘법원의 제출명령’에 관한 부분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기는 하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18.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정보도 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한다.
- ② 정정보도 청구와 반론보도 청구 모두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③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이나 중재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의 소나 반론보도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정정보도 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할 때 할 수 있으나, 반론보도 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

19.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수사처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대상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한 수사처검사가 영장신청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이를 영장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② 행정상 즉시강제에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③ 기지국 수사를 허용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해당 가입자의 동의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도 제3자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가입자에 관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방법으로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 ④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유사한 강제처분 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20. 무죄추정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무죄추정의 원칙상 금지되는 ‘불이익’에는 형사절차 내에서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도 포함된다.
- ② 공금의 횡령이라는 공무원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공정력과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은 확정판결 전의 형벌집행과 같은 것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 ③ 소년보호사건에서 1심 결정의 집행에 의한 소년원 수용기간을 항고심 결정에 의한 보호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더라도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④ 법무부장관이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을 출국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유죄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1. 통신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전화·모바일 인터넷 등 통신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데 동의해야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통신의 비밀에 대한 제한이 아니다.
 - ② 수용자가 보내려는 서신을 봉합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③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정보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금지하는 청취행위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된다.
22.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구「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궁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 ③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하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하는 것 자체가 징벌적 처우라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업무가 수형자들이 수행하는 작업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징벌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대체복무요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포함시키는 것은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23.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알권리의 청구권적 성질은 의사형성이나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을 방해하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② 군인은 불온유인물·도서·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복사·소지·운반·전파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구「군인복무규율」 조항은 정보수집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서 알권리의 청구권적 성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 ③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매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엄격한 의미의 음란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④ 표현의 내용과 표현 방법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된다.
24.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공동의 목적은 명시적인지 묵시적인지 관계없으나 단순한 ‘내적인 유대 관계’는 공동의 목적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 ③ 기존의 단체로부터 탈퇴할 자유와 결사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해당할 뿐 결사의 자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단체의 모금행위를 제한하는 구「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제1항은 모금행위를 하려는 단체의 행복추구권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

25. 검열금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검열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허용된다.
- ㉡ 검열금지에서 말하는 검열은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방영금지가처분 결정이나 행정기관의 사후제재는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검열기관이 민간인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라면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검열금지원칙에서 말하는 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 ㉣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도 금지하고 있는데 금지되는 허가에는 정기간행물등록이나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도 포함된다.

- ① ㉠㉡ ② ㉠㉢ ③ ㉢㉣ ④ ㉠㉢㉣

26.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일반적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보장, 신분박탈, 직무의 정지뿐만 아니라 ‘승진시험의 응시 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문제도 포함되나 여기서 더 나아가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 또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② 국가공무원에 대한 승급조항 및 수당제한규정의 효과로서 공무원의 호봉 상승이 지연되거나 수당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이장을 읍·면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마을 주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이장으로 임명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장이 되려는 사람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국가기관이 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아닌 공직시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7. 청원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구두와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 ㉡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청원법」에 의하면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 ㉣ 「청원법」의 청원에 대한 심사 및 통지의무는 재판청구권 및 기타 준사법적인 구제청구와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러한 의무는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① ㉠(O) ㉡(O) ㉢(X) ㉣(X) ② ㉠(O) ㉡(X) ㉢(O) ㉣(X)
- ③ ㉠(X) ㉡(O) ㉢(X) ㉣(O) ④ ㉠(X) ㉡(X) ㉢(O) ㉣(O)

28.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법상의 권리는 권리주체에게 귀속되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가능하고 수급자의 생존의 확보에 기여하면 수급자의 상당한 자기기여가 없어도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② 토지를 종래의 지목과 토지현황에 의한 이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가해지는 재산권의 제한은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금전보상으로서 위헌성을 제거해야 한다.
- ③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의 제한 또는 금지 조치는 그 자체로 구체적인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 ④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구「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피상속인 및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인 수증자 및 수익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9. 재판청구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은 피고인·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하는 행위,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 ③ 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로서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지만, 이러한 입법은 단지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형식적인 권리나 이론적 가능성만을 허용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 ④ 헌법 제27조 제3항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적용범위에는 판결절차 외에 집행절차도 포함되고, ‘신속’의 개념에는 분쟁 해결의 시간적 단축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절차의 운영이라는 요소도 포함된다.

3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하여금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을 통해 근로조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감안하여 자활사업 참가조건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조건 부과 유예 대상자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과 ‘부모에게 버림받아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 ②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 볼 수는 없다.
- ③ 「국민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 형성함에 있어 입법자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누리므로, 입법자가 가입기간의 상당 부분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의 유족만을 유족연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그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보다 짧은 경우에 유족연금의 지급을 제한한 구「국민연금법」 제85조 제2호 중 ‘유족연금’에 관한 부분은 연금보험료 납입비율을 다소 높은 3분의 2 이상으로 설정하였다고 하여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④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수급권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실시되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31.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헌법 제31조 제1항은 취학의 기회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는 차별기준으로 ‘능력’을 제시함으로써, 능력 이외의 다른 요소에 의한 차별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여기서 ‘능력’이란 ‘수학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학교 입학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는 합리적인 차별기준을 의미한다.
- ㉡ 헌법 제31조 제6항 소정의 교육제도 법정주의는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방침과 세부적인 사항을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인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후기학교로 정하여 신입생을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고등학교별 특성과 필요성에 따라 신입생 선발시기와 지원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으로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된다.
- ㉢ 학교가 학생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의견을 제시할 권리는 자녀교육권의 일환으로 보호되지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가 가해학생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조치가 적절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는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 ㉣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 교육의 기회균등권은 정신적·육체적 능력 이외의 성별·종교·경제력·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교육을 받을 기회를 차별하지 않고, 즉 합리적 차별사유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특히 경제적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 정책까지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32.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와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한다.
- ② 실업방지 및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는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 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 사회국가원리 등에 근거하여 도출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인정할 헌법상의 근거는 없다.
- ③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친다.
- ④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권 보장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사이에서 대등성을 확보하여 적정한 근로조건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므로, 반드시 모든 노동조합에게 각별로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3. 국회에 관한 헌법 규정으로 빈 칸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A)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 ㉡ 정기회의 회기는 (B)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C)일을 초과할 수 없다.
- ㉢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D)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A: 4분의 1 B: 90 C: 40 D: 120
 ② A: 4분의 1 B: 100 C: 30 D: 90
 ③ A: 5분의 1 B: 90 C: 30 D: 90
 ④ A: 5분의 1 B: 100 C: 40 D: 120

34. 국회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② 「국회법」상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를 연다.
 - ③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35.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 같이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 ②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
 - ③ 대통령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을 할 때, 중한 형에 대하여 사면을 하면서 그 보다 가벼운 형에 대하여는 사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대통령은 정상적인 재정운용·경제운용이 불가능한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와 공공복리의 증진과 같은 적극적 목적 달성이 필요한 경우에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행사할 수 있다.
36. 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잔여임기가 6개월 남아 있는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헌법에 의하면 국무총리는 잔여임기 동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 ③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기구이므로, 그 회의의 결정은 대외적 효력이 있다.
 - ④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는데, 그 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되고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37.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법관징계법」에 의하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이 있고, 징계가 청구된 법관이 징계등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징계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징계등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 ㉡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동종사건의 하급법원을 기속하므로, 동종사건의 하급법원은 사실판단이나 법률판단에 있어서 상급법원의 선례를 존중할 법적 의무가 있다.
- ㉢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 ㉣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의 의장과 대법관전원합의체의 재판장으로서 각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 각 결정권을 가진다.

- ① ㉠ ② ㉠㉡ ③ ㉡㉣ ④ ㉡㉢㉣

38.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지만, 동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는 당해 사건의 재판을 전제로 하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심판대상을 변경할 수 없다.
 - ③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지만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는 없다.
 - ④ 하나의 헌법소원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청구와 동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청구를 함께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39.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는 물론 대법원에 의해 파기환송되기 전후의 소송절차를 모두 포함한다.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절차와 동법 제68조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심판대상인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위헌제청신청인이나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의 침해여부에 관한 심사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판대상인 법률조항이 헌법에 부합하는가를 심사해야 한다.
- ㉢ 「헌법재판소법」은 법률의 위헌결정,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에 대하여는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권한쟁의심판 결정에 대하여는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 ㉣ 규범통제절차인 「헌법재판소법」의 위헌법률심판절차는 대립 당사자 개념을 상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참가인에게 이른바 참가적 효력을 미치게 할 필요성도 인정되기 때문에 보조참가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71조는 위헌법률심판에서 준용된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40.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청구취지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해당 조항에 의하여 추가 또는 변경된 청구서가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권한쟁의심판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 ③ 국가기관의 ‘헌법상 권한’이 아닌 ‘법률상 권한’은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하여 형성·부여된 권한일 뿐, 국회의 입법행위를 구속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문제 삼고 있는 침해의 원인이 ‘국회의 입법행위’인 경우에 청구인의 ‘법률상 권한’을 침해의 대상으로 삼는 심판청구는 그 권한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 ④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주체인 국회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심판절차 계속 중 사망한 경우,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승계되거나 상속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절차는 종료된다.